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	
	보도	2017.4.13.(목) 15:00부터	배포	2017.4.12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유 재 훈(02-2100-2601)	담 당 자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517)		

제 목 : 자본시장조사단,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최

-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 자체 조사 역량을 강화
-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하여 자본시장 조사단 및 “디지털 포렌식 팀”을 격려하고, 포렌식을 통한 사건 초기 증거 확보를 강조

-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'17. 4. 13일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여,
 - 2017년 4월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*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,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소개 및 직접 시연
 - * 컴퓨터·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하여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

<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17.4.13(목) 15:00~15:30 /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
 -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, 자본시장조사단장,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업체 대표이사
- 행사내용 : ①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계획
② 포렌식 시스템 운영 시연

-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, 선관위, 국세청 등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임
- ‘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(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)’처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성 및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
 -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현저히 단축(7~10일에서 1~2일)
 -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,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
 -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·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하여,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·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
-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“디지털 포렌식 팀”을 운영할 계획
 -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금년 4월에 이수 완료
 -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
- 또한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, 공정위,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,
 -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

-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하여,
 -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의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,
 -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힘쓰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 및 “디지털 포렌식 팀”을 격려
- 또한,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,
 -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
- 앞으로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,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‘일벌 백계’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

※ 별첨 :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3년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



(붙임)

자본시장조사단 설립 3년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

I. 자본시장조사단 주요성과

- 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(이하 “조사단”)은 검찰·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
 - ※ 조사단(22명) : 금융위(9), 검찰청(5, 검사2 포함), 금감원(5), 거래소(2), 예보(1)
 - 조사단은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사건분류를 수행하고, 긴급·중대사건은 증선위가 바로 검찰에 고발·통보하는 신속처리 절차*(Fast Track)를 실시하여 사건처리 기간**을 크게 단축
 - * 조사단설립이후 Fast Track 처리 건수('17년 3월말) : 74건
 - ** 사건처리기간: ('12.1월~'13.8월) 223일 → (자본시장조사단 조사사건) 150일로 평균 73일 단축
 - 사건분류 등을 통한 효율적 조사활동으로 금감원의 적체된 불공정거래 미착수 사건* 축소
 - * 조사대기 사건 : ('12년 말) 75건 → ('17년 3월말) 56건
- ② 조사단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(한미약품, 한진해운 등)에 대해서 직접 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 되도록 노력

<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건>

 - ① 회사 내부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
 - ②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사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,
 - ③ 전 그룹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 등
- ③ 국제증권기구(IOSCO)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집행위원회(C4)에 가입하여, 미국·중국·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*를 통해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의 조사 역량을 강화
 - * 중국 증권감독당국(CSRC), 미국의 증권 및 선물감독당국(SEC 및 CFTC), 홍콩 증권감독당국(SFC) 등과 30건의 조사공조 수행

II. 평가 및 향후 계획

- ① (조사신속성 제고)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사·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

⇒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 세우고, 불공정거래 조사·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

- ② (조사체계 발전)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 조사권·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, 불공정거래 사건관리·조사지원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·강화

⇒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사건관리 및 조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, 주가 조작 등 세력에 대한 '무관용·엄단' 원칙을 확립

- 해외 해외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소재 회사 및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·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

- ③ (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) 시장질서교란행위 시행("15.7.1.)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조항 적용을 통한 과징금 부과

⇒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, 조사·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해나갈 계획